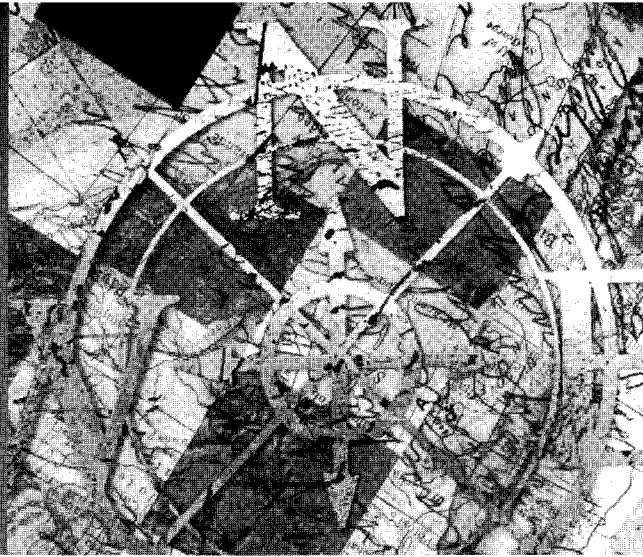


국립축산과학원 · 농촌여성신문 공동기획
 FTA대응 한국농업희망탐색시리즈 (24) :
오리산업 현황과 생산성 향상 방안
 농촌여성신문 이완주 칼럼니스트 8월 5일



2009년 국내 오리산업 진단

최근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급속한 신장을 해서 2005년부터 농림업 생산액 부분 10대 산업에 진입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생산액은 5천824억 원으로 축산업 생산액(11조2천773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오리 생산액은 모든 가축 중 돼지, 한·육우, 젓소, 닭에 이어 5대 축종으로 부상했다.

사육수수는 2000년 1만3천 농가가 513만3천 마리에서 2007년 7천100 농가가 1천51만3천 마리를 사육해서 규모는 2배로 증가하고 농가는 약 반으로 감소했다. 농가당 평균 1천463마리이며 2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지난 1991년 67.3%였던 것에 비해 2007년에 97.2%로 증가했다.

전업농가 819호의 평균 사육수수는 12,478마리로 전

업화·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장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사육규모의 신장과 전업화가 이뤄졌다는 데에서 다른 가축과 크게 구별된다.

오리산업은 주요 축산업 중 가장 먼저 수입 개방된 품목이나 1991년 수입개방 당시 대비 2007년 생산량(119,065톤) 증가비율이 무려 2,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 165%, 돼지 182%, 계육 및 계란 156%의 증가율을 비교해 타축종에 비해 월등히 증가해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잘 나가던 수출, 시에 무릎 꿇어

오리고기 수출은 1997년 21만 불에서 2003년 199만



불, 2005년에는 368만 불로 매년 큰 신장세를 보였다. 2006년 말 수출량은 190만 불(361톤)로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홍콩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오리육 계열업체들이 본격적인 해외수출 사업에 착수, 일본 등지에 점차 많은 물량을 수출했다.

2003년 이후 홍콩으로 수출이 막히자 2004년부터 새롭게 러시아로 수출량이 증가됐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연간 1만5천 톤을 중국·대만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오리고기 수입대국이다.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장점과 소비 성수기가 우리나라 비수기인 겨울철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계열업체가 지난 2006년까지 대일수출물량을 늘려오다 2006년과 2007년에 AI 재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의 오리고기 자급률이 17%에 불과한 만큼 수출의 잠재력은 커서 우리나라가 AI청정지역으로 인정되면 업계의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수입은 2000년 836만 불(3천764톤)에서 2005년 59만 불(57톤)로 급감했다.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에서의 2004년 AI발생이 그 원인이었다. 그 당시에는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AI가 상시 발생되고 있어 오리 냉장·냉동육의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AI 바이러스가 열처리로 죽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의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이 향상돼 2004년부터는 생육(냉장·냉동)을 제외한 열처리 오리육(훈제 등)은 수입이 재개됐다. 그러나 중국의 AI발생이후 주요수입국이 대만·미국·프랑스로 바뀌고, 이 중에 2007년부터는 대만이 주 수입국이 되고 냉동오리 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대국의 냉동정육 kg당 수입가격은 대만산 3.28불, 프랑스산 3.16불, 미국산 3.4불, 중국산 3.58불이다.

오리고기의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AI 등 질병 발생이다. 중국은 생산비가 우리보다 월등히 적게 들어 수출이 어렵지만 지리적으로나 성수기가 달라 일본으로

수출은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60일 내외 사육된 가슴살 선호하는데 국내 출하일령(42일령)의 가슴살은 적어 현재보다 15~20일 정도 사육일수를 늘려야 한다. 이에 따른 사료비의 추가 발생으로 수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으로의 수출 재개를 위해 준비사항은 AI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부터 특별기간방역체제에서 상시방역체제로 전환됐고,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에 출입구 및 축사내 소독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미미한 게 현실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염병 박멸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농가 스스로도 철저한 방역과 예찰 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일본 수출을 위해 농민에게 15일 이상 사육일수를 늘리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료구매자금과 생산효율을 올리기 위한 사육시설 현대화자금 우선 배정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제도 도입 ▲시장개척과 제품 홍보 ▲브랜드화 사업체 세제혜택 등 추가지원 필요하다.

FTA 타결에 따른 오리산업의 문제점은 오리고기가 별도의 품목분류(HS)가 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준분류에 의하면 오리는 산동물 2품목과 오리고기 11품목으로 분류돼 있고 11품목에는 가타 가금류도 포함돼 있어서 오리고기만의 통계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오리고기는 다른 축산물과 함께 급격한 관세율 인하는 없을 것이고 양허협정의 진행에 따라 조절될 것이므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초 통계자료 부족이 아킬레스건

2007년 육용오리 마리당 생산비는 4천792원으로 2006년보다 5.9% 증가했다. 그 결과 마리당 소득은 전년대비 83%나 감소했다. 생산비 증가 요인은 생산

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증가가 주요인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된 생산비는 270원인데 그 중 사료비가 184원을 차지했다. 또한 축사 내 깔짚으로 사용되는 왕겨가 쌀 소비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장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깔짚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2007년 육용오리 생산비는 오리병아리 가격(965원/마리)의 하락으로 가축비가 전년대비 마리당 127원 감소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농가의 순수익은 2005년의 마리당 1천 원대에서 2007년 200원 대로 계속 떨어졌다.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문제점이 많다. 종자오리의 관리와 생산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원종오리→종오리→실용오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체계도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실용오리를 종오리로 30%나 재사용하고 있어 능력저하는 물론 질병확산에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주로 수입하는 종오리도 과연 우리 환경에 적합한지조차 검증되지 않았다.

오리는 최근 부상한 종축이라 국가적인 정책지원이나 연구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오리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오리관련 통계는 1년에 1회 발행되는 기타가축 통계로 사육두수와 호별 사육두수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오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 통계의 부재로 인한 수급 예측 및 조절에 큰 어려움이 있다.

오리에 대한 표준 사양관리, 표준사육시설, 질병 방역 프로그램 등도 아직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 표준설계도 미비로 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점차 오리 사육이 집단화됨에 따라 전염성 간염과 오리패혈증 등 질병이 상시 발생할 우려도 높다.

정부는 종자오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통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및 방역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농가의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개선 교육과 함께 주요 질병의 예방접종과 축사 내 소독시설 설치에 보조와 저리용자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